



2007년 유럽 고용전망

장신철 (주OECD 대표부 노무관)

■ 머리말

유럽경제가 부활하고 있는 것인가? 유럽 대륙국가들(특히 유로 12개국)은 2001년 이후 지속되어 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2006년 경제지표가 예상 외로 좋게 나오면서 유럽대륙 경제의 회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로국가들의 실업률은 2% 수준으로 미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80년대 초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을 거치면서 실업률이 9%대까지 상승한 이후 지난 20년간 고실업이 구조화·고착화되어 버렸다. 또한 경기부진과 연금급여 등 복지지출 증가, 만성적 고실업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정부부채가 크게 늘어나 GDP의 3%를 초과하게 되었다.¹⁾ 반면, 영미 계통 국가들은 1980년대 들어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완화와 강도 높은 리스트럭처링, 다운사이징, M&A 등 구조조정 실시와 시장원리 회복을 강조한 신자유주의 처방을 실시하여 경제회생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1990년대 중반 이후 건실한 경제성장과 5%대 미만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해 오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많은 유럽국가도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그 결과는 2005년까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다. 따라서 <표 1>에서 보듯이 2006년 OECD 유럽국가들의 경제성

1)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정부부채 급증에 대응하여 1997년 안정및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체결 당시 회원국들의 정부부채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지키기로 합의한 이후 유럽중앙은행(ECB)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장률이 2.8%, 유로국가들이 2.6%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과 2006년 11월 실업률이 EU 25개국은 7.7%, 유로국가들은 7.6%를 기록하여 실업률도 지속 하락하면서 8% 이하로 하락했다는 사실에 크게 고무될 만하다. 일부에서는 유로국가들이 추진해 온 노동법 및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보험 개혁 등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표 1〉 유럽지역의 실질 GDP 성장률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

| |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추정) |
|---------|--------|------|------|------|------|------|------|----------|
| OECD 유럽 | GDP성장률 | 3.6 | 1.3 | 1.4 | 1.2 | 2.5 | 2.0 | 2.8 |
| | 실업률 | 8.4 | 8.2 | 8.6 | 8.9 | 8.9 | 8.6 | - |
| 유로 12개국 | GDP성장률 | 3.8 | 1.9 | 0.9 | 0.8 | 2.0 | 1.4 | 2.6 |
| | 실업률 | 8.1 | 7.8 | 8.2 | 8.7 | 8.8 | 8.6 | 8.0 |
| 미국 | GDP성장률 | 4.1 | 0.8 | 1.9 | 3.0 | 4.4 | 3.3 | 2.7 |
| | 실업률 | 4.0 | 4.7 | 5.8 | 6.0 | 5.5 | 5.1 | 4.7 |
| 일본 | GDP성장률 | 2.4 | 0.4 | -0.3 | 2.5 | 4.0 | 2.1 | 2.3 |
| | 실업률 | 4.7 | 5.0 | 5.4 | 5.3 | 4.7 | 4.4 | 4.3 |

자료 : 유럽통계청(EUROSTAT), OECD Employment Outlook, 각년도, 유럽집행위원회 재정경제국.

본 글에서는 2006년 유럽 대륙국가들, 그 중에서도 경제규모가 가장 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 그리고 풀더 모델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최근의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지표들이 얼마나 호전되었는지 그리고 2007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이들 국가에서 최근에 추진된 노동시장 개혁 동향도 소개하기로 하겠다. 2007년도 경제성장 및 고용 전망은 주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ECD,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분석을 참조하였다.

참고 : 유럽의 경제 규모

유럽은 흔히 EU-25개국 또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12개국으로 분류된다. 2005년 기준으로 EU 25개국의 GDP 규모는 미국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EU 회원국은 2004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10개국이 늘어나 25개국이 된 데 이어, 2007년에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새로이 회원국이 되었으며, 3개국(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터키)이 가입 후보군에 올라 있다.

EU 25개국 중 유로 12개 국가가 차지하는 GDP 비중은 71.9%에 달하며(표 2),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 중 영국, 스웨덴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11개국의 GDP 비중은 9.2%에 불과하다.

〈표 2〉 유럽국가들의 경제 규모

| 국가 | GDP 규모(비중) | 1인당 GDP | 국가 | GDP 규모(비중) | 1인당 GDP |
|-------|---------------|---------|---------|-----------------|---------|
| 유로 국가 | 7,801.3(71.9) | 24,880 | 벨기에 | 289.5(2.7) | 27,640 |
| 독일 | 2,082.5(19.2) | 25,250 | 핀란드 | 141.7(1.3) | 27,020 |
| 프랑스 | 1,710.0(13.6) | 25,520 | 그리스 | 217.3(2.0) | 19,610 |
| 이탈리아 | 1,421.6(13.1) | 24,260 | 아일랜드 | 134.8(1.2) | 32,348 |
| 스페인 | 1,000.0(9.2) | 23,090 | 룩셈부르크 | 25.9(0.2) | 56,700 |
| 오스트리아 | 235.2(2.2) | 28,570 | 네덜란드 | 476.3(4.4) | 29,190 |
| 포르투갈 | 176.6(1.6) | 16,710 | EU-25개국 | 10,846.7(100.0) | 23,460 |
| 영국 | 1,653.9(15.2) | 27,460 | 덴마크 | 156.6(1.4) | 28,900 |
| 스웨덴 | 250.7(2.3) | 27,760 | 기타 국가 | 8,785.5(9.2) | - |
| 미국 | 10,310.1 | 34,750 | 일본 | 3,671.9 | 25,670 |

주 : 1) GDP 규모(단위: 10억 유로)는 2005년 기준의 구매력 환산지수(PPP) 값임.

2) 1인당 GDP 규모도 2005년을 기준으로 한 구매력 환산지수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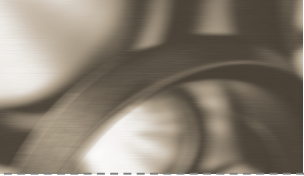
3) 음영으로 처리된 국가가 유로 12개국임.

자료 : 유럽통계청(Eurostat)

■ 2007년의 세계 경제 및 노동시장 전망과 유럽

세계경제 전망

2006년 세계경제는 3.9%의 견실한 성장을 할 것으로 World Bank는 예상하고 있다(표 3). 중동사태의 불안으로 인해 한때 배럴당 75달러에 육박했던 원유 가격에도 불구하고 낮은 이자율의 지속, 소비자물가의 안정, 주택경기 호황이 성장의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10.4%)·러



시아(6.8%)·인도(8.7%) 등 BRICS 국가와 개발도상국들의 높은 경제성장(7.0%)은 특기할 만하다. 개발도상국들의 성장률 7%는 고소득 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인 3.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World Bank는 2007년도 성장률을 2006년보다 다소 낮은 3.2%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주택가격의 하락과 이자율의 상승을 들고 있다. 2006년 3사분기 이후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주택가격 하락 추세와 이자율 상승 그에 따른 소비 감소는 경기부진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대미수출의 감소와 상품 및 유가 하락을 초래하여 전반적으로 전세계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²⁾ 그러나 중국이 지속적으로 10% 가까운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등 아시아 국가들의 고속성장은 미국의 경기하락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 2007년 세계경제 주요지표 전망

(단위: %, US \$)

| | 2004 | 2005 | 2006 (추정) | 2007 (전망) |
|-------------------|------|------|-----------|-----------|
| 전세계 실질 GDP 성장률 | 4.1 | 3.5 | 3.9 | 3.2 |
| 소비자물가 상승률(G-7 국가) | 1.8 | 2.2 | 2.5 | 2.1 |
| 석유 가격(배럴당, US\$) | 37.7 | 53.4 | 64.0 | 55.9 |
| 이자율(6개월) | 1.6 | 3.6 | 5.4 | 5.7 |

자료 : World Bank(2006).

유럽국가의 경제 및 노동시장 전망

가. 2006년 실적

<표 4>에서 보듯이 유럽집행위원회(재정경제국), IMF, OECD 등은 2006년 EU-25개국은 2.8%, 유로국가들은 2.4~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2005년 경제성장률보다 1%포인트

2) 2000~2006년 중반까지 미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은 14.6%의 GDP 상승을 가져 왔으나 주택가격 하락과 주택투자 감소는 2007년도에 -0.2%의 GDP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도 주택가격 하락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나 상승한 것이다. 이들 3개 연구기관들은 매년 봄·가을 두 번 경제전망 수치를 발표하는데, 2006년 상반기의 경제실적이 예상 외로 호전됨에 따라 봄 전망 때보다 가을 전망 수치들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였다. 2006년 유럽경제의 성장은 물론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 안정세와 세계경제의 활력에 따른 외부 요인에 힘입은 바 크지만, 기업과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기업투자 증가,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내수시장의 호전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최근 달러화 대비 최고의 환율을 기록하고 있는 유로화도 유럽경제의 회복세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³⁾

〈표 4〉 유럽국가들에 대한 GDP 성장 전망

(단위 : %)

| | EU-25 | | | EURO 국가 | | |
|-------------------------------|-------|------|------|---------|------|------|
| | 2006 | 2007 | 2008 | 2006 | 2007 | 2008 |
| EC (2006 봄) | 2.3 | 2.2 | - | 2.1 | 1.8 | - |
| (2006 가을) | 2.8 | 2.4 | 2.4 | 2.6 | 2.1 | 2.8 |
| IMF (2006년 4월) | 2.4 | 2.3 | - | 2.0 | 1.9 | - |
| (2006년 9월) | 2.8 | 2.4 | - | 2.4 | 2.0 | - |
| OECD (Economic Outlook No.79) | - | - | - | 2.2 | 2.1 | - |
| (Economic Outlook No.80) | - | - | - | 2.6 | 2.2 | 2.3 |
| World Bank (2006년 12월) | - | - | - | 2.4 | 1.9 | 1.9 |

2006년 유럽국가들의 경제호조는 노동시장에 그대로 반영되어 고용률 및 실업률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다. 유로지역은 전분기와 대비하여 1/4~3/4분기까지 매분기 0.4%에 가까운 고용성장률을 기록하였고, EU 25개국은 0.3%의 성장세를 나타냈다(그림 1). 전년도 동기 대비로는 유로지역이 1사분기 1.0%, 2사분기 1.3%, 3사분기 1.4%(EU 국가는 각각 0.9%, 1.1%, 1.1%) 증가하여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것이다.

3) 유로화는 2002년부터 실물 화폐로 정식 통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유로화 도입 목적은 물가안정과 경제 통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다. OECD는 유로화 도입이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만성적인 인플레이에 시달리던 국가들의 물가가 안정이 되었고 지난해 석유가격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세를 보였다. 유럽연합(EU) 국가들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유로화는 정치적·경제적 동맹체로서의 상징성과 힘을 발휘하고 있다.

실업률은 유로국가의 경우 2003년 4월부터 평균 9%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2005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어 2006년 4월에는 8% 이하로 하락하였다. 2006년 11월 현재 유로 국가는 7.6%, EU 25개국은 7.7%까지 하락하여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5년 11월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유로국가는 0.9%포인트, EU국가는 1%포인트나 실업률이 하락한 것이다.

나. 2007년 전망

2007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모든 경제분석 기관들이 2006년보다 다소 낮은 2.1%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7년도에 예상되는 부정적인 변수들로는 주택가격 급락에 따른 미국 경제의 경착륙(hard-landing), 유가의 재상승, 전반적인 주택경기의 침체, 유로화의 급등 가능성 등이다. 반면 긍정적인 변수로는 미국경제의 연착륙, 유가의 추가 하락에 따른 소비증가, 유로국가의 구조개혁 효과의 본격 시현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영국,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2006년부터 집값 하락이 뚜렷해 졌지만 경기부진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변수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택경기의 하락과 이자율의 상승에 따른 소비위축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07년도 경제성장률은 2006년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고용증가가 예상되나 EU 및 유로국가 모두 2006년의 1.4% 증가보다는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실업률은 지속적인 하락 기조가 유지되어 2007년에는 EU, 유로 국가 모두 8%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5〉 유럽 국가의 고용증가율 및 실업률 전망

(단위 : %)

| | EU-25 | | | | | EURO 국가 | | | | |
|-----|-------|------|------|------|------|---------|------|------|------|------|
|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고용률 | 0.4 | 0.7 | 0.9 | 1.4 | 1.1 | 0.4 | 0.7 | 0.7 | 1.4 | 1.2 |
| 실업률 | 9.0 | 9.1 | 8.8 | 8.0 | 7.6 | 8.7 | 8.9 | 8.6 | 8.0 | 7.7 |

자료 : 유럽집행위원회.

■ 유럽 주요 국가의 2006년 실적 및 2007년 고용전망

독일

안정적인 사회시스템, 이원화 직업교육훈련제도(dual system)에 따른 양질의 직업학교와 높은 제조업 기술수준 등을 자랑해 온 독일도 통일비용 부담과 관대한 사회보장제도, 경직적인 노동시장 등으로 인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고실업과 2% 미만의 낮은 경제성장률이 고착화됨으로써 지난 20년 가까이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표 6>에서 보듯이 2006년 경제성장률은 2.4%에 달하여 2001~2002년의 0%대 성장, 2003년의 마이너스 성장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고용증가율도 2005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06년 0.4%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정부 재정적자율도 그동안 GDP 대비 3%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긴축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2006년의 경우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로 인해 정부 재정적자율이 3% 이내로 축소될 수 있게 되었고, 2007년에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수입 증가로 인해 1%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6> 독일의 주요 경제 지표 및 전망

(단위 : %)

|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GDP 성장률(전년가격 대비 기준) | -0.2 | 1.2 | 0.9 | 2.4 | 1.2 |
| 고용증가율 | -1.7 | -0.5 | -0.6 | 0.4 | 0.5 |
| 실업률 | 9.0 | 9.5 | 9.5 | 8.9 | 8.4 |
| 정부 재정적자율 | -4.0 | -3.7 | -3.2 | -2.3 | -1.6 |

주 : 정부 재정적자율은 GDP 대비 비율임(이하 동일).

자료 : 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y; Economic forecasts, 2006 가을 (이하 동일).

2007년도에도 전반적인 경제 확장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성장률은 2006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1.2%로 전망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20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VAT)가 3% 포인트 인상된 것으로서⁴⁾, 이로 인한 인플레이 가능성과 소비수요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인상 전에 자동차 등 고가 물품을 2006년 중 조기 구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비 감소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노동시장 지표는 계속 개선되어 고용은 0.5% 증가하고

실업률은 8.4%로 축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독일경제와 노동시장 호전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독일이 저성장-고실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2003년 이후 추진해 온 개혁은 인상적이지만, 일단은 2006년의 경기호전이 유럽국가와 세계경제 전반의 활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이 2003년 이후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개혁이라고 칭해질 만큼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독일의 개혁은 우리에게 ‘아젠다 2010’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경제 활성화, 실업감소를 위한 잠재력 창출을 목표로 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 프로그램들을 포괄하고 있다. 소득세 인하, 중소기업 지원, 직업훈련, 교육, 노동시장, 보건, 가족지원 분야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개혁의 핵심은 노동법 및 노동시장의 개혁이라 할 수 있다. 독일 노동시장과 법제의 특징은 경직적인 고용보호법제(높은 해고보호 조항, 임시직 계약규제 등), 9%대의 높은 실업률 및 높은 장기실업자 비중(1년 이상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54%), 높은 사회보험료율(4대 사회보험료율이 노사 합 40%), 55세 이상자의 저조한 고용률 등이었는데(표 7), 하르츠(Hartz)⁵⁾ 위원회가 주도한 작업은 그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하르츠 I~IV로 법제화되어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⁶⁾ 아젠다 2010은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에 있어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고, 노조와 시민당의 오랜 공조체제를 갈라 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에 대해 OECD는 올바른 방향임을 지적하면서도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한 고용계약과 산별이 아닌 기업단위 임금결정방식의 확산,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유인 제고, 연방고용청(BA) 개혁의 지속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민주주의와 경제의 근간이 되어

4) 2007년 1월부터 노사가 부담하는 총 실업보험료율이 6.5%에서 4.5%로 인하되었는데, 이 중 1%포인트는 3%포인트의 부가가치세 인상 중 1%포인트로, 나머지 1%포인트는 연방고용청(BA)의 효율화를 통해서 조달하기로 함에 따른 결정이다.

5) 폴크스바겐(VW) 자동차사의 인사노무담당 이사였다.

6)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르츠 I : 인력알선대행사(PSA)의 도입과 연방고용청(BA)의 취업알선 독점 폐지, 52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요건의 완화, 근로자과연의 완화, 고용보험 급여의 축소, ② 하르츠 II : 실업자의 개인자영업(ICH-AG) 창업지원, 저임금근로인 Mini-Job에 대한 세금 혜택 부여, ③ 하르츠 III : 연방고용청의 조직개편, 해고제한 규정 적용사업장 확대(5→10인), 단시간근로 및유기근로계약법 적용의 완화, ④ 하르츠 IV : 실업부조와 공적부조를 통합한 ‘실업급여 II’의 신설

〈표 7〉 독일의 고용 지표

(단위 : %)

| | 1994 | 2002 | 2003 | 2004 | 2005 |
|--------------------|------|------|------|------|------|
| 실업률(15-64세) | 8.3 | 8.2 | 9.1 | 9.5 | 9.5 |
| OECD 평균(15-64세) | 7.7 | 6.9 | 7.1 | 6.9 | 6.6 |
| 고용률(15-24세) | 51.4 | 44.8 | 42.4 | 41.9 | 42.6 |
| (55-64세) | 35.9 | 38.6 | 39.0 | 41.8 | 45.5 |
| (여성 15-64세) | 54.7 | 58.8 | 58.7 | 59.2 | 59.6 |
| OECD 평균(여성 55-64세) | 46.1 | 49.4 | 50.3 | 50.8 | 51.8 |
| (여성 15-64세) | 52.9 | 55.3 | 55.3 | 55.8 | 56.1 |

자료 : OECD(2006), *Employment Outlook*(이하 각국 자료 동일).

은 해고보호와 단체협약의 전통을 어느 정도나 추가로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2005년 9월 총선에서는 집권당인 사회민주당(SPD)이 아젠다 2010의 역풍을 맞아 슈뢰더 총리가 물러나고 대신 야당인 기민·기사연합(CDU/CSU)의 메르켈이 총리에 당선되었는데, 메르켈은 작은 정부와 연금 수술 등 우파식 개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간의 개혁으로 인해 충분히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있고 또한 좌우 대연정이라는 불안한 동거정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독일은 노사정간 사회적 합의의 전통도 별로 없는 것도 고려가 필요하다. 2006년도는 눈에 띄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없는 상태이지만, 법정퇴직연령의 상향조정(65→67세)을 통한 연금개혁안이 마련되었고, 의료보험 체계의 재정 메커니즘 혁신과 경쟁원리 도입 등 의료보험 개혁안이 대연정 합의에 의해 마련되는 성과가 있었다.

프랑스

2006년 2월 촉발된 최고고용계약법(CPE) 파동으로 인해 프랑스 노동시장의 문제점이 보다 적나라하게 알려졌다. 2007년 4월 대선 후보감으로 지목되었던 빌팽 총리는 이로 인해 대선 후보군에서 탈락되었고, 프랑스 국민들은 세계로부터 ‘혁명은 잘하지만 개혁은 못하는 나라’라는 비아냥을 받아야 했다. 프랑스 노동시장의 문제점은 독일의 그것과 흡사하다. 과거 20년 동안 한 번도 8%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는 높은 실업률, 20%가 넘는 청년실업률, 경직적인 고용보호법제(EPL), 관대한 사회보험급여, 고령자의 매우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등이 특징이다. 프랑스 국민들도 1990년대 이후 프

랑스가 갈수록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는 사실은 잘 인식하고 있고, 이런저런 개혁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독일처럼 광범위한 개혁이 이루어진 바 없다. 앵글로색슨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큰 프랑스 국민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가치(자유, 평등, 박애)를 유지하고 싶어하며, 프랑스적인 해법을 찾고 싶어하기 때문에 자유시장적인 논리에 기초한 철저한 개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2006년도 프랑스 경제도 <표 8>에서 보듯이 2%대 성장을 이루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11%대까지 상승한 이후 고착화되었던 고실업도 2006년 9.3%로 뚜렷한 완화기미를 보이고 있다. 고용증가율은 2006년 0.8%에 이를 것으로 보여 오랜 정체를 벗어났다. 정부의 재정적자율도 2005년에 이어 GDP의 3% 이내로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각종 지표들은 2007년도에도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률은 2.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실업률은 9.0%까지 하락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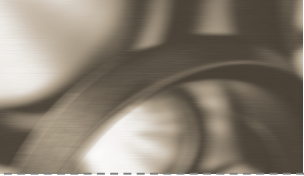
<표 8> 프랑스의 주요 경제 지표 및 전망

(단위: %)

|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GDP 성장률(전년가격 대비 기준) | 1.1 | 2.3 | 1.2 | 2.2 | 2.3 |
| 고용증가율 | 0.0 | 0.0 | 0.2 | 0.8 | 0.9 |
| 실업률 | 9.5 | 9.6 | 9.7 | 9.3 | 9.0 |
| 정부 재정적자율 | -4.2 | -3.7 | -2.9 | -2.7 | -2.6 |

그러나 프랑스의 노동시장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경직적인 고용보호법제로 인해 사업주들이 신규고용을 꺼림으로써 노동시장이 탄력성이 없으며, 유능한 청년층들의 고용이 갈수록 악화되어 노동시장 내부자(insiders)와 외부자(outsiders) 간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5~24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20%대 초반에서 줄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실업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기 때문에 굳이 경직적인 고용보호법제를 운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OECD 회원국들의 의견이다(2004년 OECD 프랑스 경제검토보고서). 2006년초 도입코자 했던 CPE는 2005년 도입된 CNE⁷⁾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사업주가 26세

7) CNE는 노조가 없는 20인 미만 기업이 근로자 추가고용시 2년간의 수습기간(현행 노동법은 3개월만 인정)을 인정하고, 동 기간중 사업주 필요에 따라 아무 때나 해고가 가능토록 한 제도이다. 프랑스 노동법에서는 해고시 '진실하고 심각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CNE에 의해 이러한 이유가 없어도 무방하게 되었다.



미만 자를 고용할 때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2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지만 결국 학생과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으로 인해 철회되는 비운을 맞았다. 둘째는, 프랑스는 OECD 국가중 인력활용도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는 국가라는 점이다. 주요 이유는 ① 청년층의 낮은 경제 활동참가율 ② 고령층의 조기 노동시장 이탈 ③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시간 등에 기인한다. 15~24세의 고용률이 낮은 것은 프랑스 학생들도 우리나라와 같이 평균 취학기간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길기 때문이지만, 55~64세의 고용률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1980년대에 시행한 고령자 조기퇴직제의 후유증과 55세 이상이면 구직활동 의무없이 주어지는 실업급여 혜택 그리고 60%가 넘는 연금의 소득대체율 등에 기인한다. 55~64세의 고용률은 37.1%에 불과하여 OECD 평균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낮다. 셋째는 2002년 기준으로 GDP의 3.7%라는 넘는 막대한 금액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쓰고 있지만 고용서비스의 효율성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1958년 실업보험을 도입한 역사적 맥락 때문에 실업급여의 지급은 노사 공동운영기관인 UNEDIC이라는 상공업고용협회가, 취업알선은 반(半)국가기관인 국립고용청(ANPE), 직업훈련은 국립직업훈련협회(AFPA)가 별도로 담당함으로써 one-stop 서비스 제공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표 9〉 프랑스의 고용 지표

(단위 : %)

| | 1994 | 2002 | 2003 | 2004 | 2005 |
|--------------|------|------|------|------|------|
| 실업률 (15-24세) | 27.5 | 20.2 | 21.5 | 22.7 | 22.8 |
| 고용률 (15-24세) | 22.0 | 24.1 | 27.0 | 26.4 | 26.0 |
| (55-64세) | 33.4 | 39.3 | 40.3 | 40.6 | 40.7 |
| (여성 15-64세) | 18.8 | 20.4 | 23.5 | 23.0 | 22.6 |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프랑스도 2000년 이후 간헐적인 노동시장 및 사회보험 개혁을 추진해 왔다. 주요한 것을 몇 가지 소개하면, 2003년 폭넓은 연금개혁이 이루어져 퇴직연령 인상(60→65세), 민관의 연금 불입기간 일치, 민간의 연금 불입기간 연장(40→42년)이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앞서 설명한 CNE가 도입되어 20인 미만 기업에서의 해고가 손쉽게 되었고, 2007년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최장 4년에서 32개월로 단축되었다. 근로시간의 경우 오드리(Aubury)법에 따라 2000년 주당 35시간 근로가 도입되었으나 법정 35시간 근로시간제는 유지하면서도 근로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개혁이 꾸준히 이루어져 연간 초과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130→180→240시간으로 늘어났다. 고령

자의 해고를 막는 장치로 1987년 도입된 ‘들라랑드(Delalande)’ 세금제도⁸⁾도 2010년까지 완전 폐지 될 예정이다.

앞으로 프랑스가 어떠한 추가적인 개혁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금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에 따라 다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당에서는 최초로 여성 후보인 세골렌 루아얄이 여당의 사르코지 내무장관과 경합하고 있지만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02년 대선과 총선에서는 시락 대통령과 우익이 승리하면서 그 이전의 사회당 정부가 유지해왔던 35시간 근로시간제, 연금 등 사회보장, 노동시장 등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 좌파든 우파든 갈수록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프랑스의 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보수성향의 우파 집권시에는 보다 시장지향적인 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2006년 이탈리아 경제도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났다. 경제성장률은 1.7%까지 올라갔고, 고용증가율도 그동안의 정체상태에서 벗어나 1.3% 증가하였다. 2000년까지 줄곧 10%를 상회하던 실업률은 2001년 9%대로 진입한 후 2006년에는 7.1%까지 하락하였다. 2007에도 경제 호조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증가율은 0.5% 수준으로 둔화되고 실업률은 7.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 둔화의 주요한 원인은 만성적인 정부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재정긴축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지출 중 특히 연금과 관련한 재정지출이 2001년 GDP 대비 14.7%를 차지하여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금법 개정은 주요한 개혁과제가 되고 있다.⁹⁾ 이탈리아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2007년 정부의 재정적자률은 GDP 대비 2.9%를 기록함으로써 최초로 3% 이내로 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 50세 이상의 고령자 해고시에는 사업주가 실업보험 특별기여금을 고용보험관리기관인 상공업고용협회(ASSIDIC)에 납부해야 하는 제도이다. 가령 50세의 근로자를 해고했을 시에는 50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 2개월분의 임금을 특별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9) 2001년 기준으로 EU 국가들의 GDP 대비 연금지출은 평균 10.6%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의 연금지출이 GDP 대비 13%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표 10〉 이탈리아의 주요 경제 지표 및 전망

(단위 : %)

|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GDP 성장률(불변가격 기준) | 0.0 | 1.1 | 0.0 | 1.7 | 1.4 |
| 고용증가율 | 0.6 | 0.0 | -0.4 | 1.3 | 0.5 |
| 실업률 | 8.4 | 8.0 | 7.7 | 7.1 | 7.0 |
| 정부 재정적자율 | -3.5 | -3.4 | -4.1 | -4.7 | -2.9 |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몇 가지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고용률(특히 55~64세), 광범위한 비공식 부문의 존재,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남북 지역간의 격차 등이다. 55~64세 고용률은 2005년 현재 31.4%에 불과하여 OECD 평균보다 20%포인트 정도나 낮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비공식부문은 이탈리아 노동력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규직에 대한 엄격한 해고보호 조항과 노동조합의 반자본주의적 성향도 특징으로 꼽힌다. 길쭉한 반도국가로서 산업이 밀집된 북부와 그렇지 못한 남부와의 실업 격차(약 3배)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OECD는 비록 측정이 쉽지 않은 문제는 있으나, OECD의 선진 경제권에서 비공식 고용(informal employment)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 5% 정도로 보고 있다. 비공식 고용은 저임금, 세금 탈루, 사회보장분담금 탈루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세제개혁, 관리 및 규제 합리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의 동원을 통해 이들을 공식 고용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표 11〉 이탈리아의 고용 지표

(단위 : %)

| | 1994 | 2002 | 2003 | 2004 | 2005 |
|--------------|------|------|------|------|------|
| 실업률 (15-24세) | 30.5 | 26.3 | 26.3 | 23.5 | 24.0 |
| 고용률 (15-24세) | 28.3 | 26.7 | 26.0 | 27.2 | 25.5 |
| (55-64세) | 29.4 | 28.9 | 30.3 | 30.5 | 31.4 |
| (여성 15-64세) | 35.4 | 42.0 | 42.7 | 45.2 | 45.3 |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해서 이탈리아 정부도 2001년 이후 폭넓은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1년 총선에서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중도우편연합이 승리하면서 발표한 노동사회부문 개혁안과 2002년 노사정이 합의한 '이탈리아를 위한 협약(Pact for Italy)', 2003년의 노동법 개혁, 2004년 연금개혁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상의 조치들에 의해 15인 미만 기업이 신규 근로자 채용으로 15인 이상

이 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 노동법 제18조의 해고보호 조항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고, 용역근로·자유계약근로 등 보다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인정하게 되었다. 과도한 연금지출 억제를 위해 수급조건도 보다 엄격하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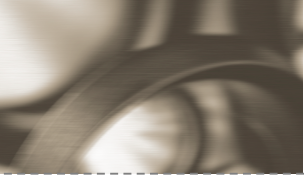
이러한 개혁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업상황이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기는 했으나 고용보호법제 완화가 비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낮은 고용률과 만연한 비공식부문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진전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임금·물가연동제 폐지, 임금과 고용정책·계약절차 등에 관한 합의 등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 노사정 합의가 활성화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개혁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2006년 4월 총선에서 집권한 프롤리 총리의 좌파연합 신정부는 총선에서 확실한 우세를 보이지 못했으며, 공산당·중도 가톨릭·비종교계 등 다양한 군소정당이 좌파연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개혁과 재정안정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원만히 풀어 나가면서 정국 안정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페인

1975년까지의 프랑코 독재, 좌우 갈등으로 인해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유럽의 2등 국가로 취급되어 온 스페인이 최근 들어 EU의 성장을 견인하면서 주변 국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1993~2003년까지 평균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OECD 유럽국가 평균인 2.5%를 크게 앞질렀고, 2004년 이후에도 3%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만 해도 15% 이상의 실업률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지속 하락하여 2005년 실업률은 9.2%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유로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20% 이상 격차가 있던 1인당 GDP도 12% 이하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2007년 들어서도 스페인의 경제 활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각종 고용지표도 좋은 결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2>에서 보듯이 GDP 증가율은 유로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고용은 3.0% 성장하며¹⁰⁾, 실업률은 199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0) 1998년 이후 외국인 이주근로자가 매년 평균 42만 명씩 유입됨으로써 강한 고용증가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12〉 스페인의 주요 경제 지표 및 전망

(단위 : %)

|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GDP 성장률(전년가격 대비 기준) | 3.0 | 3.2 | 3.5 | 3.8 | 3.4 |
| 고용증가율 | 2.4 | 2.6 | 3.1 | 3.2 | 3.0 |
| 실업률 | 11.1 | 10.7 | 9.2 | 8.1 | 7.9 |
| 정부 재정적자율 | 0.0 | -0.2 | 1.1 | 1.5 | 1.1 |

7.9%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정적자율도 EU 4강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서 2005년 이후 1%대의 흑자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페인도 1996년 총선 이후 집권한 국민당(보수당) 주도로 많은 노동시장 개혁을 해 오면서 노사 정간의 사회협약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004년 3월 총선에서는 3·11 스페인 열차 테러의 영향으로 집권당의 아스나르 총리가 물러나고 좌파계열의 사회노동당(PSOE)이 집권을 했지만 큰 정책기조의 변화없이 높은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인데, 비정규직 문제는 일부 진전은 있었으나 여전히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규직은 높은 고용보호법제¹¹⁾와 과도한 퇴직금¹²⁾ 혜택을 누리움에 따라 기업에서 정규직 고용회피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1985~95년 사이에 신규고용의 95%는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비중은 1985년 15%에서 1995년 35%까지 증가되었다. 따라서 과거의 고실업 문제가 이제는 비정규직 확산 문제라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로 변화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1994년 이후 2006년까지 다섯 차례나 노사정 합의에 노동법 개혁을 통해 해고의 경직성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응해 왔다. 우선, 해고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일부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신규 고용자와 실업여성, 6개월 이상 또는 45세 이상의(장기) 실업자에게는 부당해고

11) 법상 정리해고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행정관청의 사전 허가를 받기가 거의 어렵고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990년대까지 정리해고를 활용하는 기업이 거의 없었다. 2003년 OECD의 EPL 분석에 의하면 스페인은 조사대상 28개국 중 포르투갈, 멕시코, 터키에 이어 4번째로 EPL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2) 정리해고를 타당, 부당, 무효로 구분하여 퇴직금이 다르다. 타당한 정리해고시에는 근로 1년당 20일분의 임금을 최대 12개월분까지 지급하고, 부당한 정리해고시에는 근로 1년당 45일분의 임금을 최대 42개월분까지 지급한다. 무효인 정리해고시에는 근로자는 복직되고 해고시부터 복직까지의 모든 임금이 지급된다.

시 퇴직금이 45일분에서 33일분(최대 24개월)으로 경감되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24개월 이상 같은 자리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동시에 정규직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 인센티브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존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30세 미만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때 사회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스페인의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근로자의 30% 수준까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표 13〉 스페인의 고용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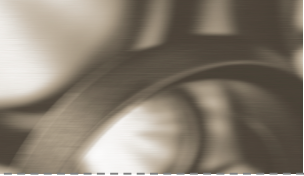
(단위 : %)

| | 1994 | 2002 | 2003 | 2004 | 2005 |
|--------------|------|------|------|------|------|
| 실업률 (15-64세) | 19.5 | 11.1 | 11.1 | 10.6 | 9.2 |
| (15-24세) | 42.9 | 22.2 | 22.7 | 22.0 | 19.7 |
| 고용률 (15-24세) | 28.3 | 36.6 | 36.8 | 38.4 | 41.9 |
| (55-64세) | 32.7 | 39.7 | 40.8 | 41.3 | 43.1 |
| (여성) | 31.5 | 44.9 | 46.8 | 49.0 | 51.9 |

OECD는 아직도 스페인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을 제 공하고 있는 정규직에 대한 보다 유연한 EPL을 강조하고 있고, 정규직의 노동이동을 촉진하고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해 오스트리아에서 채택하고 있는 근로자 개인별 퇴직금계정(individual severance insurance accounts)의 도입토록 권고한 바 있다. 20% 수준에 달하는 청년실업률과 55~64세의 낮은 고용률(43.1%)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스페인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개혁과정에서 중요한 고비 때마다 노사정 합의를 통해 타협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냄으로써 스페인의 노동시장 개혁에도 희망을 주고 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에서 출발하여 플더모델로 불리는 노사합의를 기초로 1990년대 고성장·저실업의 기적을 일구어냈지만, 2001년 이후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일부에서는 플더모델의 종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6년 경제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고용증가율도 1.6%의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률도 3.9%로 2005년에 비해 크게



〈표 14〉 네덜란드의 주요 경제 지표 및 전망

(단위 : %)

|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GDP 성장률(전년가격 기준) | 0.3 | 2.0 | 1.5 | 3.0 | 2.9 |
| 고용증가율 | -1.1 | -1.4 | -0.3 | 1.6 | 1.4 |
| 실업률 | 3.7 | 4.6 | 4.7 | 3.9 | 3.0 |
| 정부 재정적자율 | -3.1 | -1.8 | -0.3 | 0.0 | 0.1 |

낮아졌다. 2007년도에도 이러한 견실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부의 재정적자율도 최초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이후 네덜란드가 겪은 경기침체의 일부 원인으로서 노동시장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과 노동력 활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역시 정규직에 대한 높은 경직적인 고용보호법제(OECD 국가 중 최고 수준)과 최장 5년에 이르는 관대한 실업급여 그리고 구직활동에 대한 허술한 심사 등을 문제로 꼽을 수 있다. 경직적인 고용보호수준은 경기하강시 기업의 고용조정 코스트를 높이게 됨으로써 적응을 더디게 만들고 경기침체를 보다 장기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1990년대 이후 파트타임 고용이 크게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4%포인트 정도 낮아 여성 노동력 활용이 불충분한데, 이것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방과 후 아동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는 2004년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1,357시간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표 15〉 네덜란드의 고용 지표

(단위 : %)

| | 1994 | 2002 | 2003 | 2004 | 2005 |
|--------------|------|------|------|------|------|
| 실업률 (15-24세) | 42.9 | 22.2 | 22.7 | 22.0 | 19.7 |
| 고용률 (15-24세) | 28.3 | 36.6 | 36.8 | 38.4 | 41.9 |
| (55-64세) | 32.7 | 39.7 | 40.8 | 41.3 | 43.1 |
| (여성) | 31.5 | 44.9 | 46.8 | 49.0 | 51.9 |

네덜란드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2006년 10월부터 해고 관련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주의 재량을 높이는 방향의 정리해고 완화 조치를 취하였고, 실업급여도 최대 38개월까지로 축소하였다. 아울러 네덜란드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병 및 장애관련 급여'도 수술하였는데, 2006년 1월부터 과거의 장애보장법(WAO)을 '근로능력에따른근로와소득법(WIA)'으로 대체하여 소극적 급여에 의


존해 왔던 복지수급자들에게 노동시장 참여와 근로유인을 강화시켰다.¹³⁾ 또한 여성 노동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1월부터 신아동보육법(Childcare Law)을 제정하여 아동이 있는 일하는 저소득 부모가 일을 할 경우 정부 및 사업주, 부모가 각각 1/3씩 부담토록 하는 고용조건부(in-work) 아동 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도 2006년 11월 총선에서 각종 개혁에 불만을 느낀 국민들이 좌파에게 폭넓은 지지를 보냄으로써 정치 지형이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하여 개혁이 당대에는 인기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 맺음말

이상에서 유럽 전체 및 주요 국가의 2007년도 고용전망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양호한 경제성장 및 노동시장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과거 10년간의 침체된 분위기에서 크게 탈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국가들 스스로도 1990년대 후반 이후 갈수록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영미계통 국가들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영미형 노동시장 모델은 성공 사례로, 유럽대륙형 모델은 실패 사례로 인식되는 경향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이라 할 수 있는 2%를 초과하고 각종 노동시장 지표에 있어 주요한 전기를 마련한 2006~2007년은 매우 중요한 좌표가 될 전망이다.

과연 2006~2007년의 좋은 성과가 일종의 전환점 구실을 하게 될지 아니면 전반적인 하강 국면에 있어서 단지 예외적인 한두 해가 될는지 관심이 가는 사항이다. 많은 유럽국가들은 자신들의 모델이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유지해 나가고자 노력하지만, 영미형 국가들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경우 추가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오랜 노사협회의 전통과 정책 협의,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평등, 잘 발달된 사회안전망, 가족친화적 사회정책 등은 분명 유럽식 모델의 강점이고, 최근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 문제에 대한 보다 적절한 해법이 될 수도 있지만, 경제와 노동시장 상황이 다시 악화될 경우 효율성을 중시하는 영미형 모델로의 추가적인 수렴 압박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장점으로 여겨져 왔던 유럽적인 가치와 많은 제도들이 이제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요즈음, 단순하게 비유를 한다면 “맥

13) 2005년 기준으로 15~64세 인구 1,094만 명 중 장애인수가 273만 명에 달하고 있다.



주를 유리잔에 따라 마시는 전통을 이어나갈지, 아니면 목마른 김에 병을 입에 대고 마시는 효율성을 택할지" 유럽대륙 국가들이 앞으로 어떠한 내용의 개혁을 추진해 나갈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이다. <<L

참고문헌

- www.oecd.org (OECD 홈페이지 country section)
- <http://epl.eurostat.ec.europa.eu> (유럽통계국 홈페이지)
- www.ecb.int/stats (유럽 중앙은행 홈페이지)
- www.banque-france.fr (프랑스 중앙은행 홈페이지)
- <http://ec.europa.eu> (유럽집행위원회 홈페이지)
- European Commission(2006), *European Economy*, Economic forecasts Autumn
- Eurostat(2006), 매월 News release
- OECD(2005), *Economic Survey of the euro area, 2005*, Policy Brief
- OECD(2006), *Economic Survey of the euro area, 2007*, Policy Brief
- OECD(2005, 2006), *Economic Survey of Germany, France, Italy, Spain, Netherlands*
- OECD(2006), *Economic Outlook*, No. 79 및 No. 80.
- OECD(2006), *Employment Outlook*, Chapter 1
- OECD(2006), "Improving Labor Market Performance in France"(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504)
- OECD(2006), "Labor Market Reform in Germany"(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512)
- World Bank(2006), *Global Economic Prospects 2007*.